

특정감사

# 감 사 보 고 서

- 감사결과 이행실태 -

2020. 3.

감 사 원

#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	1
1. 감사배경 및 목적 .....	1
2. 감사중점 및 대상 .....	1
3. 감사실시 과정 .....	1
4. 감사결과 처리 .....	1
II. 감사결과 .....	2
1. 감사결과 총괄 .....	2
2. 처분요구사항 .....	3
(1) 징계요구사항 처리업무 부적정(주의) .....	4
(2) 표창 추천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	7
(3) 징계위원회 의결내용 회보업무 불철저(주의) .....	10

# I. 감사실시 개요

---

## 1. 감사배경 및 목적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에 대하여 처분요구 취지와 다르게 부당 이행하거나 이행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원인 규명 및 책임소재 검토 등을 통해 감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9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에 대한 부당 이행 및 이행 소홀로 인한 문제점을 확인하여 책임을 규명하는 등 국토교통부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 3. 감사실시 과정

이번 감사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의 부당 이행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2019. 11. 13.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20일간 감사인원 12명을 투입하여 실시감사를 실시하였다.

##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기관별로 감사원의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을 통해 업무처리 경위 및 향후 처리대책 등 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다. 이후 감사원은 감사대상기관이 제시한 의견 등을 포함하여 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0. 3. 13.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 Ⅱ. 감사결과

###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총 3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구 분	합 계	주 의
건 수	3	3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감사원으로부터 5급 이상 직원이 포함된 4명에 대한 징계요구를 받은 후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하지 않은 채 구청장이 임의로 ‘훈계’ 처분하고, 나머지 관련자는 마포구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 및 처분하여 감사결과 실효성 상실
-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감사원으로부터 조사개시통보를 받은 관련자에 대한 표창 결격사유 확인을 소홀히 하여 해당 관련자가 표창을 받은 후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근거로 표창 감경(불문)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감사결과의 실효성 상실
- ③ 경북대학교는 감사원으로부터 파면요구를 받은 후 징계위원회에서 파면과 다르게 의결된 내용을 감사원에 회보하지 않은 채 징계절차를 이행하여 감사원이 재심의를 요구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등 감사결과 이행절차 미이행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에게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대해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하지 않고 구청장이 임의로 처분하는 등 징계 이행절차를 부당하게 처리한 데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는 등 해당 기관에 총 3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였다.

## 2. 처분요구사항

# 감 사 원

## 주 의 요 구

제 목 징계요구사항 처리업무 부적정

소 관 기 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 치 기 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 용

### 1. 업무 개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위 관서”라 한다)는 2017. 6. 9. 감사원으로부터 지방 임기제공무원(관광분야)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전 ○국장 4급 A 등 4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하는 처분요구서를 통보받고 이를 처리하였다.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감사원법」 제32조 제11항에 따르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해당 절차에 따라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시행문에 징계요구사항은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72조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4호에 따르면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된 하위직 공무원의 징계처분은 시·도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감사원법」 제32조의2 제1항 및 제36조 제2항에 따르면 감사원의 처분 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재심의 기간 중에는 징계절차를 이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등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징계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된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대해 2017. 12. 18. 재심의 취하 등으로 인한 재심의 결과를 통보<sup>1)</sup>받았을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가 아닌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징계절차를 이행하여야 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관서는 2017. 12. 24. 징계요구를 받은 4명 중 전 △과장 5급 B에 대해서는 공로연수 중으로 정년퇴직이 임박<sup>2)</sup>하였다는 사유로, 전 ○국장 A에 대해서는 B의 직상급자로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각각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자체 ‘훈계’ 처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후 ‘훈계’ 처분하였고, 같은 해 12. 26. 채용업무 담당자 6급 C와 □팀장 6급 D에 대해서만 관할 인사위원회(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된 감사원 징계요구에 대해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조차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훈계’ 처분하고, 6급 이하 공무원만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가 아닌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징계처분하는 등 감사결과 징계요구의 실효성을 가져오지 못하게 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감사원의

---

1) 2017. 6. 29.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12. 11. 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같은 해 [12. 18.](#) 재심의 결과를 통보

2) 2017. 12. 31. 정년퇴직

징계요구 사항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업무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앞으로 5급 이상 관련자가 포함된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대해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관할 인사위원회(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감 사 원

## 주 의 요 구

제 목 표창 추천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 치 기 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 용

### 1. 업무개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위 관서”라 한다)는 2015. 12. 14. 위 관서 보건소 E<sup>1)</sup>에 대하여 표창 추천과 관련된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다.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서울특별시 2015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2015. 1. 26.), 「서울특별시 메르스 방역대책 유공자 표창계획」(2015. 11. 28.)에 따르면 외부 감사기관에 의해 감사 중인 자는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기관 자체에서 공적심의 시 이와 같은 추천 결격요건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sup>2)</sup>를 실시하면서 2015. 11. 23. E에 “메르스 의심환자 진단신고기준 등 안내업무 처리 사항”과 관련된 직원의 직무상 책임에 대한 조사개시통보<sup>3)</sup>를 시행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이 조사개시통보를 받은 E를 시장표창 추천요청 대상에서 제

1)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과에 근무

2) 감사기간: 2015. 9. 10~2015. 10. 29.

3) 2015. 11. 24. 위 관서 감사담당관 접수

외함으로써 외부 감사기관에 의해 감사 중인 공무원에게 시장표창이 수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서초구 보건소에서는 「서울특별시 메르스 방역대책 유공자 표창계획」과 관련하여 당시 E를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고자 2015. 12. 11. 위 관서 감사담당관에 E에 대한 비위사실 확인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는 2015. 11. 24. 감사원으로부터 E에 대한 조사개시통보를 접수하였음에도 이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2015. 12. 14. “E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결과 해당 없음”으로 서초구 보건소에 공문으로 회신하여 같은 날 서초구 보건소는 서울특별시에 E를 표창추천 대상자로 추천하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로 시장표창 결격사유가 있는 E가 2015. 12. 31. 메르스 방역대책 추진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한편 2016. 1. 14. 감사원은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 결과, 서초구청장에게 메르스에 대한 관내 의료기관 홍보 업무를 게을리한 E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2016. 3. 10.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E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심의하면서 E가 메르스 예방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시장표창 등을 수상한 점 등을 징계양정 결정에 참작하여 불문(표창감경)으로 의결하였다.

그 결과 조사개시통보를 받아 표창 추천대상자가 될 수 없는 E에게 2016. 3. 10. 개최된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에서 시장표창을 근거로 징계를 감경<sup>4)</sup>

하여 감사결과 징계요구의 실효성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당시 업무가 팀별로 분장되어 있어 표창 추천과 관련된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업무는 ◎팀에서 수행하고 감사원 조사개시 통보 문서는 ☆팀에서 접수함에 따라 ◎팀과 ☆팀 간의 업무 협조 미흡으로 E의 결격사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위사실 확인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앞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조사개시통보를 받아 표창 추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표창 대상으로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4) 이후 2016. 4. 8. 위 관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하면서 감사원으로부터 조사개시 통보를 받아 표창 추천의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서초구 보건소에 E의 표창 취소를 요청하였고, 서초구 보건소의 표창 취소 요청(2016. 4. 11.)에 따라 표창이 취소됨(2016. 5. 13.)

# 감 사 원

## 주 의 요 구

제 목 징계위원회 의결내용 회보업무 불철저

소 관 기 관 경북대학교

조 치 기 관 경북대학교

내 용

### 1. 업무 개요

경북대학교(이하 “위 대학”이라 한다)는 감사원이 2015. 5. 12. 참여연구원 부당 등록 등으로 연구비를 편취하고 부당 집행한 관련자에 대하여 파면을 요구한 데 대하여 같은 해 7. 20.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으로 의결된 것을 그대로 해임처분(2015. 8. 17.)하여 감사원으로 그 집행결과를 회보(2015. 8. 22.)하였다.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감사원으로부터 파면요구를 받은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징계위원회 등에 그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해당 징계위원회 등이 설치된 기관의 장은 그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감사원은 파면요구를 한 사항이 파면의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등에 직접 심의 또는 재심의<sup>1)</sup>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기간 동안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

1)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위원회 등에 재심의 요구

정지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대학은 감사원의 파면요구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여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요구 이외의 의결결과를 받았을 때에는 감사원이 의결내용을 검토하여 상급 징계위원회에 재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의결을 집행하기 전 의결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대학은 감사원으로부터 파면요구를 받은 관련자에 대하여 2015. 7. 20. ‘경북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이 아닌 해임으로 의결된 것을 감사원에 통보하지 않고 같은 해 8. 17. 해임처분한 이후 감사원에 그 집행결과(해임처분)를 회보(2015. 8. 22.)하였다.

그 결과 감사원이 파면을 요구한 징계요구와 다르게 해임으로 의결된 사항을 감사원에 통보하지 않고 집행(해임처분)을 완료하여 감사원이 상급 징계위원회인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경북대학교는 지적내용을 수용하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감사원법」과 관련 법령 및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북대학교 총장은 앞으로 감사원의 파면요구에 대해 파면과 다르게 의결된 의결결과를 감사원에 회보하지 않아 재심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징계절차 이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